

#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67호 | 발행인 : 백선희 | 발행일 : 2018년 06월 05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 유아교육·보육 비용 지원 정책, 동상이몽.. 해법은?

### I. 문제 제기

2013년부터 영유아 전 연령 전 계층에 대한 무상 보육·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지난 2013년 이후 영유아 전 연령 모든 가구에 유아학비·보육료(기관 이용 영유아 대상), 가정 양육수당(기관 미이용 영유아 대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 이를 위해 연간 8조원 이상의 국가 재정<sup>1)</sup>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의 효과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영유아 가구에 교육·보육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부모들은 높은 지지를 보이긴 하나, 실질적인 가계 부담 경감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임.
  - ▶ 부모 의견 조사 결과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에 적극 찬성 32.6%, 찬성 53.1%로, 전체 응답자의 85.7%가 지지 의사를 밝힘.<sup>2)</sup>
  - ▶ 가정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 또한 적극 찬성 31.9%, 찬성 51.8%에 달함.<sup>3)</sup>
  - ▶ 하지만, 이들 가구가 영유아 자녀의 교육·보육을 위해 지출하는 총 비용은 가구당 월평균 28만 9천원으로 적지 않은 수준을 보였으며, 교육·보육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구 비중은 11.8%에 그침.<sup>4)</sup>
- 영유아 부모들의 의견은 실질적 수혜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정책 만족도 결과는 주요한 정책 평가의 바로미터가 됨.
  - ▶ 그러나 반대로 영유아 부모들은 수혜자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과의 형평성 혹은 정책 효과성은 고려하지 않아 객관성을 잃은 정책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본고는 현행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등에 대한 부모와 전문가 사이의 견해 차이를 살펴보고자 함.
  - ▶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지원 정책의 우선 순위를 유추해보고, 향후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정책 수혜자인 영유아 부모와 정책의 형평성과 효과성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 사이의 의견 차이를 살펴보고자 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V) (최효미·김나영·김태우, 2017)』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임.

1) 2016년 기준 3~5세 누리과정 지원금 4조 382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조 1,880억원, 가정 양육수당 1조 2,192억원으로 총 8조 4,454억원이 소요됨(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금 및 예산 추이」, 보건복지부 「2016년도 보육통계」 p.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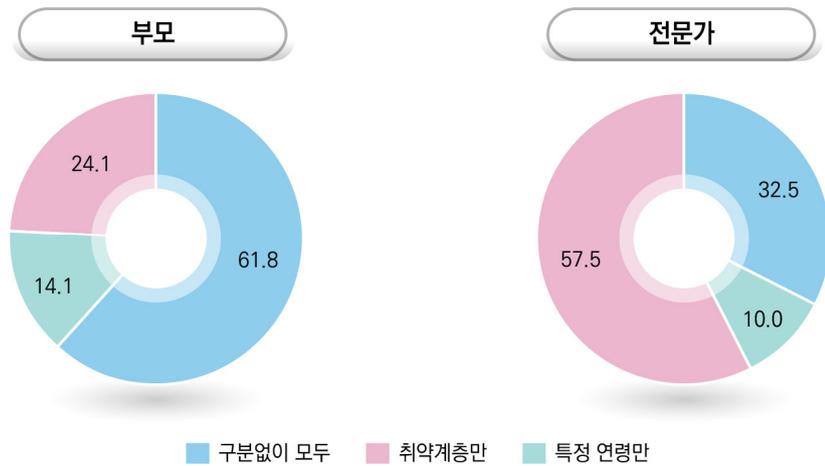
2), 3),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II.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sup>5)</sup>

유아학비·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지급에 따른 재정 압박을 고려하더라도 부모는 현행과 같은 지원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취약계층만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0~5세 유아학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에 따른 재정 압박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은 어디까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부모들은 ‘구분 없이 모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61.8%로 가장 높았음.
  - ▶ 반면, 전문가들은 ‘취약계층만(장애 영유아, 한부모, 저소득 가구 등)’ 지원해도 된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1]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지원 대상에 대한 의견

- 특정 연령만 지원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 비용 지원이 필요한 연령은 2세 이상이 1세 이하보다는 높은 지지를 보임.
  - ▶ 전문가에 비해 부모들은 모든 연령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임.
  - ▶ 전반적인 경향성은 1세 이하 영아에 비해 2세 이상의 영유아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부모와 전문가 공통의 응답임.

<표 1>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지원이 필요한 연령

단위: %, (명)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응답자 수
부모	45.4	50.3	63.1	65.1	62.2	61.2	(157)
전문가	6.3	6.3	25.0	25.0	25.0	12.5	( 16)

주: 1) 부모 조사의 경우 비용 지원을 ‘특정 연령만’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것이며, 전문가 집단의 경우 관측치가 적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취약계층만’에 응답한 경우만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 모두가 응답한 결과임.

2) 각 연령에 대해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5)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영유아 부모 1,119명과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에 대해 조사한 결과임. 전문가는 보육 및 유아 교육 관련 학계 전문가(전공 분야는 아동, 보육, 사회복지, 경제 등)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됨.

6)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등은 장애,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차등을 의미하며,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은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금액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임.

교육·보육비용 지원을 현행처럼 전 계층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지원 금액의 조정 방식에 대해서도 부모는 '현행 그대로'에, 전문가는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에 높은 지지를 보임.

-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지원 대상을 '구분없이 모두'라고 응답한 경우, 지원 금액 조정 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모는 '현행 그대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전문가는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이 가장 높았음.<sup>6)</sup>
  - ▶ 즉, 전문가들은 지원 대상을 차등 없이 모든 가구로 하는 것에 낮은 동의를 보였을 뿐 아니라, 영유아 모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가구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은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46.2%)에 높은 지지를 보임.
  - ▶ 부모는 모두에 대한 동일한 지원(68.7%)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뚜렷함.

<표 2>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지원 금액 조정 방식에 대한 의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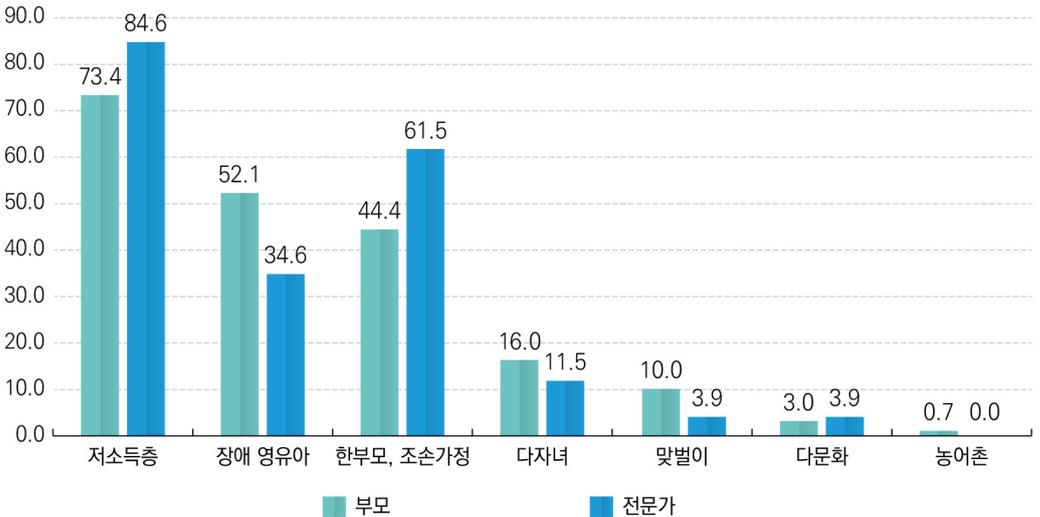
	현행처럼 차등 없이	가구 소득에 따른 차등	이용시간에 따른 차등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등	계(수)
부모	68.7	14.6	9.0	7.7	100.0(691)
전문가	23.1	46.2	7.7	23.1	100.0( 13)

주: 비용 지원 대상에 대해 현행처럼 '구분없이 모두'라고 응답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등에서 취약계층을 우선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부모와 전문가 모두 저소득층을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함.

-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에서 취약계층을 우선해야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가장 우선적인 비용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부모와 전문가 모두 저소득층을 최우선으로 꼽음.
  - ▶ 부모 조사 결과에서는 저소득층(73.4%) > 장애 영유아(52.1%) > 한부모, 조손가정(44.4%) > 다자녀(16.0%) > 맞벌이(10.0%) 순임.
  - ▶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는 저소득층(84.6%) > 한부모, 조손가정(61.5%) > 장애 영유아(34.6%) > 다자녀 (11.5%) > 맞벌이(3.9%), 다문화(3.9%) 순임.

단위: %



[그림 2] 비용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취약계층

주: 1) 비용 지원 대상에 대해 '취약계층만'이라고 응답한 경우와 금액 조정 방식에 대해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등'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결과임.  
 2) 2순위까지 응답한 결과를 합산하였으며, 응답 비율의 합은 200%임.

## Ⅲ. 정책적 시사점

현행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 영유아 가구 전체에 대한 비용 지원은 지속하되,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 지원은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영유아 부모들은 현행과 같은 전 계층 전 연령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매우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행 비용 지원에서 정책이 후퇴할 경우 반감이 매우 클 수 있음.
  - ▶ 부모들과 전문가 모두 비용 지원에 차등이 있어야 한다면 취약계층,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 또한, 비용 지원 금액이 차등된다면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이 적합하다는 응답도 다른 기준(연령, 이용시간, 취약계층 여부 등)에 비해 부모와 전문가 모두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
- 여론과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향후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지원 강화는 저소득층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부 차등을 두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저항을 줄이면서도 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보임.

최효미 부연구위원 hmchoi@kicce.re.kr